

1. [복지부] 자살예방 대책 : 고립, 위기가구

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

- 소득 수준, 경기 변동, 실직·폐업·부채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 증가

* 경제문제 원인 자살 : ('15) 3,089명(23.0%) → ('20) 3,429명(25.4%) → ('24) 4,398명(29.6%)

- 1인 가구 증가,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구조적 상황이 집약되면서 고독사¹⁾ 위험 확산, 특히 고립 위기 심화는 자살²⁾로 전이 가능성

1) 고독사 사망자 수 : ('17) 2,412 → ('19) 2,949 → ('21) 3,378 → ('23) 3,661 → ('24) 3,924명

2) 고독사 중 자살자 : ('22) 495명(13.9%) → ('23) 516명(14.1%) → ('24) 526명(13.4%)
(남성이 77%로 많고, 연령별로 50대 31%, 40대 25%, 60대 20% 순)

○ 연령층¹⁾, 가구특성²⁾에 따른 고립 위험 요인 내포

1) (청년) 구직문제, 정신건강, (중장년) 실직, 가족해체, 건강문제, (노년) 만성질환, 사별, 돌봄문제 등

2) (1인) 2인 이상 가구 대비 가사·건강·소통 어려움, (다문화) 언어·문화 차이, (북향민) 편견·부적응, (국가유공자) 고령화·전쟁트라우마 등

- 고립, 위기가구의 경제·관계·심리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,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발굴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예방체계 구축

< 고립, 위기가구 자살사례 분석 >

사례	▪ (20대 A씨)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족과 단절된 채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 ▪ (40대 B씨) 사기 피해, 가족관계 단절, 고시텔 생활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 후 병사 ▪ (60대 C씨) 사업 실패 후, 가족관계 단절, 영양 상태 불량 상태에서 자살 ▪ (80대 D씨) 동거인 사망 후, 주거 불안과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							
위기 요인	• 개인 감당 어려운 고충 • 주변 지지체계 부재		+	• 소득 감소, 채무 • 실직, 주거 불안		+	• 가족, 친구 등 관계 단절 • 소속감 상실	
시사점	차단된 위기 신호의 정교한 포착 필요			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경제 지원 필요			고립 예방을 위한 연결 및 서비스 필요	

◆ **방향** : 고립,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

◆ **목표** : ①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, ②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상승('25년 64% → '30년 70%), ③사회적 고립도 감소('25년 33% → '30년 27%)

◆ **과제** : ①위기신호 포착, ②경제적 지원, ③고립예방 서비스, ④대응기반 구축

2 추진 과제

1. 자살, 고립 위기신호 포착

- **(자살 고위험군 발굴)** **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('26.2~)** 자해·자살시도 등 위기정보*에 가중치 적용해 자살위험자 우선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('27, 약 2만명)
* 자살고위험 관리 대상,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·자살인 자, 정신질환(우울증 등)
- 자살징후 확인 시(고독사위험자 판단도구) 고위험군으로 선별·관리
- **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('15~)**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성이 높은 과다 채무,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 확대('26.12)
* 채무조정 중지자(신복위),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(서금융), 불법사금융 피해자(금감원)
- **(복지 핫라인 구축)**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(불법사금융 피해 등)에 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 - 지자체 간 서비스 의뢰체계* 확대('26.12)
* (현행)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 → (확대) 금융감독원
- **(발굴 인프라 확충)** **가구 접근성** 읍면동 복지 담당인력(찾아가는 보건복지팀) 단계적 증원 추진('27~), 방문 상담 시 생활물품세트(희망드림꾸러미) 지원('27)
- **민간 인적안전망** 경비원, 배달원 등 생활현장 주민이 자살위험자 등 발굴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(예 : hy 야쿠르트 등)
- **복지위기 알림 앱*** 신고내용에 자살 언급 시, 24시간 긴급상담 대응
* 경제적 어려움, 고립·고독 등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쉽게 신고하는 앱 운영 중 (주거복지사,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등 연계해 활용 확대 추진, '26.하)

2.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

- **(긴급복지)** 자살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생략하고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지원 읍면동 현장 재량*으로 소액(30만원)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('27)
* 읍면동에서 접수되어 선정 지원까지 일정기간 소요(3일)되는 경우
- **(기초생활보장)** **최저생활** '27년 기준 중위소득 6.70% 인상('26.7) 및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*('27~)으로 경제위기 사각지대 해소
* (생계·의료)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 검토

- **채무**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자살 방지 등을 위해 채무 조정·상담·연계 등 종합지원 강화(신용회복위원회) **금융**
 - * 채무상담, 채무조정, 개인회생·파산 지원, 고용·복지 연계,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
- **주거** 주거급여 인상('27, 급지·가구원수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3.3~12.4% ↑), 취약계층(쪽방·고시원 등) 및 긴급상황(사망·화재 등)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**국토**

3.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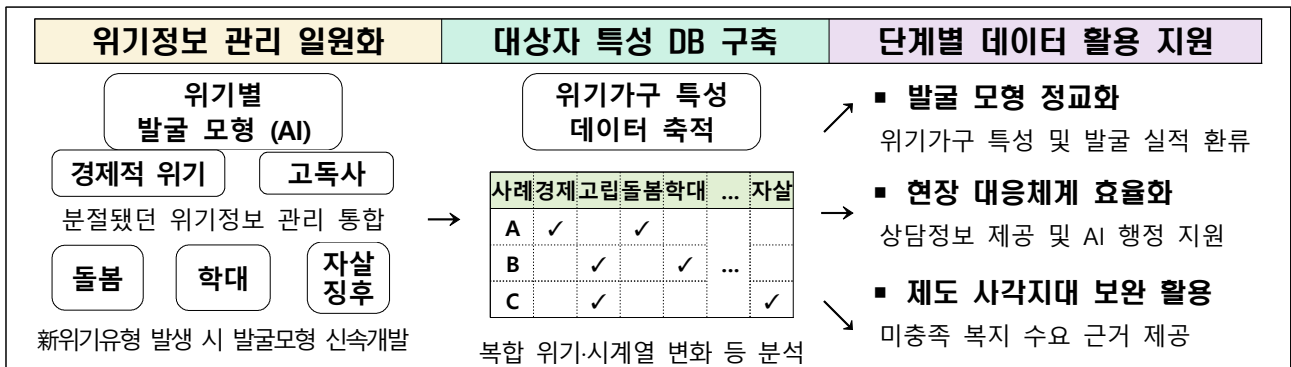
- **(생애주기별 고립 예방)** 청년, 중장년, 노년의 특성·욕구 고려한 서비스
 - **청년** 자살 위험이 높은* 고립·은둔청년의 고립 정도에 따라 공동생활, 일상회복, 관계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해 회복 지원
 - * 고립·은둔청년의 75.4%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음(청년 평균은 2.3%, '23 실태조사)
 -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서 전국 확대('26.9~),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 통해 청년 생활권에서 밀착 지원('27~)
 - * 지원기관에서 상담, 사례관리 중 자살 고위험군 판정 시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의뢰
 - **중장년** 고독사 비중이 높은 중장년(60대男, 50대男 순)의 위험 요인, 욕구·특성을 고려한 관계 개선,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('26.2~)
 - 일상회복 지원 사업을 중장년 특화 브랜드 정책으로 개발 검토
 - * 예시 : 경제·심리 위축으로 외부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장년 위험군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출·퇴근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상회복 및 사회참여 지원
 - **노년**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및 노인일자리 확대('26년 115만개) 통한 사회참여 지원
 - * 기초연금 시행 및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된 2010년대 중반부터 노인자살률 감소('15년 58.6% → '18년 48.6% → '21년 42.2% → '24년 37.9%)
 - 고립노인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해 의료-요양-돌봄 서비스 연계('26.3~) 및 응급호출·활동감지 ICT 장비 보급 확대('26년 29.7만명)
- **(가족특성별 맞춤 지원)** 고립 위험요인 완화 및 사회안전망 연결
 - **1인가구** 고립완화 및 자살예방을 위해 생애주기·생활영역별*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('26.하, 시범사업) **성평등**
 - * (관계) 형성·유지, (돌봄) 자기관리, (소비) 지출·재무, (안전) 사고예방, (주거) 공간관리

- **한부모가족**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별가구 등에 긴급심리상담 우선 지원 및 한부모시설(116개소) 심리상담·치료 지원 강화('26~) **성평등**
- **다문화가족** 적응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등 자조활동 및 모임공간 지원, 이주배경가족 특화 원스톱 지원사업* 신규 추진('26~, 단계적 확대) **성평등**
 - * 가족센터 중심으로 자녀양육교육, 가족생활(한국어법률의료), 지역연계(일자리주민교류) 등 지원
- **북향민** 위기가구 실태조사*('26.6~8, 1,800명), 자살예방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선정 및 자살 예방 매뉴얼 제작·배포 **통일**
 - * 생활·주거, 경제위기, 건강·의료, 고립, 자살징후에 대해 방문·대면 조사(25개 하나센터)
- **국가유공자** 고령화 독거에 대응해 AI안부확인서비스 확대('25. 1천명→'26. 3천명) 및 식사지원 연계 건강·문화 등 **보훈**회관 복지프로그램 신규 도입('26)

4.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

- **(AI, ICT 활용 확대)** 자살고위험군 체계적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시스템 정보를 일원화하는 **기초** AI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검토

* ('27)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→ ('28) 통합 플랫폼 구축 → ('29) 개통·운영



- **AX-Sprint** 민간기업 AI·IoT 기반 고립예방 심리케어 서비스 확산 지원(~'27)
- **(지방정부 대응 강화)** 지방정부별 자살예방관 지정('26.3, 부단체장급 이상) 및 지역 대응 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 운영('27~), 시도 복지국장 핫라인 운영
- **성과관리·적극행정** 지방정부 복지 수준 평가 개편 및 인센티브 강화,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법적기반 마련
- **(사회적 고립 대응체계)** 복지부 1차관을 전담 차관 지정, 범정부 연계·조정
- **제도기반** 전국민 인식조사 및 위험군 심층조사('26.하), 「사회적 고립 예방법」 마련 및 범정부 협업 로드맵('27~'31) 수립 추진